

간부공무원 '재난지휘 교육·훈련' 의무화

역량 교육에 '재난 대응 능력 평가' 반영 ... 도상·합동 훈련도

충남도는 간부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난지휘 교육 및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재난지휘 역량 강화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관들의 역량에 따라 재난 진행 양상 및 피해 규모가 결정됨에 따른 조치다.

평상시 지휘관들의 재난 대응 및 수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평가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현직 실·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예비 간부공무원(승진 대상자)까지 재난지휘 역량강화 교육과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과장 승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에는 재난 대응 능력 평가를 반영한다.

실·국장을 대상으로는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재난지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훈련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장들은 천안에 위치한 충남안전체험관에서 행정·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 재난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체험도 갖는다.

각 훈련에서는 훈련조별로 부여된 문제를 중심으로 재난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실습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간부공무원 재난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간부들에게 재난 매뉴얼상 현장 책임자의 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소상공인지원 사업 '만족 93.5%'

참가 기업 249개사 대상 만족도 조사...전년대비 6.8%p 증가

충남도과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나윤수)이 추진한 2016년 소상공인지원 사업 결과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93.5%로 조사됐다.

2월 8일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 24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가 기업 가운데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대비 6.8%p 증가한 93.5%로 집계됐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제안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매년 사업을 개선한 결과로, 사업 참여업체 수도 전년 106개사에서 지난해 249개사로

134.9%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지원 가업승계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우수시장 견학 및 토론회 등 5개 분야에 249개사가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서산 장인가구 서천 서천부각 등 20개사가 지원받았다.

홈페이지 제작, 패키지 디자인 등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지원 사업’은 천안 남자새택 홍성 시승가든 등 12개사가 지원받았다.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현관 제작지원, 시설 개보수 등 지원금 지원을 하는 ‘가업승계기업 지원’은 천안 삼대방앗간, 부여 우리수산, 홍성 갈산토기 등 17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가업승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천안의

삼대방앗간은 지난 1940년부터 4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사업을 통해 쌀과 들깨 등을 분쇄하는 기계를 교체했다.

현원권 대표는 “교체된 기계로 80여 년 동안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와 진흥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금산 도현 인삼사, 금산 전국한약, 금산 진산약초 등 200개사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충남도만의 특화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7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2018년 충남도 국비확보 총력전 돌입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목표액 5조 6000억 설정

올해 도정사상 최대인 5조 3108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충남도가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5조 6000억 원으로 잡고 총력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2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와 남궁영 행정부지사,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정부예산 확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2018년 정부예산 확보전략 △국가재정운용계획 대응 방안 △예비타당성 대

충남소식

상사업 적극 발굴 △2017년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대응논리 개발 등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의 주제발표를 토대로 실국별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2018년도 예산확보 전략으로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 △항공 · 도로 · 철도 등 SOC 항만 · 어항 · 생태복원의 해양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신규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상임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 중앙부처 방문 대응, 국회캠프 운영 등 입체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2018년 중점 확보 10대 신규 사업을 보면,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162억 원), 외연도항(국가어항) 정비사업(327억 원)을 선정했다.

SOC 분야에서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465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6502억 원), 장항

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6765억 원) 등 3개 사업을 선정,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R&D 분야는 열대 · 아열대 기능성 원료 생산 플랫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70억 원), 충남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190억 원) 등 2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환경 분야는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2200억 원),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2321억 원)을, 문화 분야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3300억 원)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보완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중기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지사는 “정부예산순기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과 우리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예타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절차 미 이행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수산물 수출액 크게 늘었다

지난해 7209만 2000달러 수출 기록...전년대비 27.2% 늘어

지난해 충남산 수산물의 해외 수출 실적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수출 리스크, 국제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충남산 수산물 수출실적이 총 7209만 2000달러를 기록, 전년 5669만 2000달러 대비 27.2% 증가했다.

이처럼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과 캐

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은 285%, 러시아 100%, 말레이시아 73%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신시장 판로개척으로 413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충남산 수산물 수출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1709만 달러 △미국 1604만 달러 △일본 1137만 달러 △태국 등 동남아 1064만 달러 순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문제 등으로 수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수산물 수출업체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對) 중국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수출 주력품목인 조미 김과 스낵 김 등 해조류가 특화상품 개발 및 수출상품 안전성 강화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충남산 수산물 수출 목표를 1억 달러로 정하고, 유망·우수 업체 발굴은 물론, 해외 홍보관측,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맹부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국제적인 요인으로 수산물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도 수산물 수출 1억불 달성을 목표로 행·재정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단지 6곳 1.67km² 신규 지정

16개 산단 16.3km²는 연내 공급...산업입지 수급 안정 등 기대

충남도는 올해 6개 지구 1.67km²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하고, 16개 16.3km²의 산단이 준공돼 기업에 공급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신규 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수요 검증을 위한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이번엔 지정계획에 반영했다.

6개 산단은 공주 동현일반산단 35만 2000m², 쌍신일반산단 21만 7000m², 논산 길산일반산단 30만 1000m², 보령 청라농공단지 14만 8000m², 아산 아산음봉일반산단 46만 1000m², 청양 정산2농공단지 19만 1000m² 등이다.

또 올해 안에 준공돼 공급되는 산단은 보령 고정, 천안5, 남공주, 아산 디지털, 탕정 테크노, 인주, 서산 테크노밸리 등 14개 지구 15.83km²다.

이와 함께 논산 가야곡2와 노성특화 등 농공단지 2곳 0.47km²도 연내 준공·공급된다.

도는 올해 산단 추가 공급을 통해 원활한 기업 유치와 산업 입지 수급 안정, 고용 창출 및 경제 유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특히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등 산단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 67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남소식

도내 산단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 및 산단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별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점 운영하는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조성된 산단은 국가산단 3개소 19.08km², 일반산단 26개소 31.69km², 도시첨단산단

1개소 0.04km², 농공단지 86개소 13.72km² 등 모두 116개 지구 64.52km²이다.

조성 추진 산단은 국가산단 2곳 9.03km², 일반산단 26개소 34.42km², 도시첨단산단 1개소 1.26km², 농공단지 5곳 0.86km² 등 총 34곳 45.56km²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산단 분양률은 87.7%로, 국가산단 66.8%, 일반산단 93.9%, 농공단지는 97.5%를 기록 중이다.

장항선복선鐵 등 40대 과제 “대선 공약화”

충청 4개 시·도지사, 24일 ‘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결의문’ 채택

충남도가 대전·세종·충북도와 장항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조기 착수,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 내항) 조기 건설 등 도내 10대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에 나선다.

안희정 지사는 1월 24일 대전시청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각 시·도별로 10개 과제 씩 40개 과제를 대선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4개

시·도지사는 19대 대선을 맞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4개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4개 시·도지사는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마련한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공동 공약 과제 중,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천안~남이) 확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충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제 실현 등 10개를 내놴.

이중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는 중국 등 해외 수출입 기반 활성화와 충청권 내륙 산업물류망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서해측 준고속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한 여객·물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동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국방산업단지는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논산·계룡 지역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인

근 대전에 위치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인력 양성 등을 집적화 해 국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가 조성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일원에 동물·식물·해양 그린바이오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제 실현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권 보장과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늘리기 위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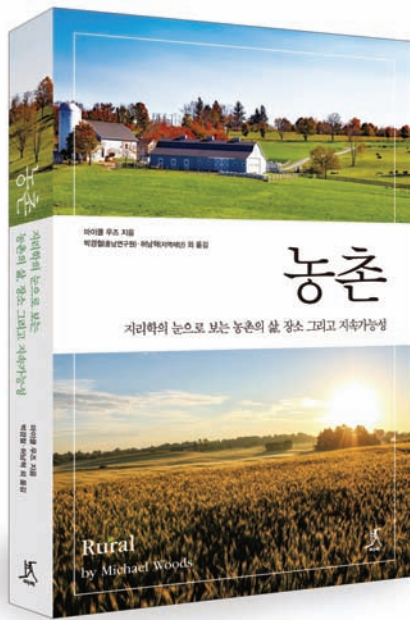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충북도는 △충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X' 축(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각각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각 시·도 현안에 대한 대전 공약화를 위해 이번 공동 공약 과제를 각 당에 전달,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남연구원, 번역서 〈농촌〉 발간

부제: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충남연구원은 다양한 기능과 상반되는 이미지가 교차하는 ‘농촌’을 다룬 번역서 〈농촌〉을 발간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 책은 영국의 대표적 농촌지리학자이자 웨일즈 에이버리스트위스대학교(University of Wales Aberystwyth) 교수인 마이클 우즈(Michael Woods)가 2011년에 집필한 ‘Rural’의 번역서다.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박사와 지역재단 허남혁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등 번역에 참여한 집필진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공간이나 농촌 사회에 대

한 연구는 도시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특히 농촌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연구는 너무나 부족해서 우수한 해외도서를 번역해서라도 알리고 싶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복잡하고 모호한 ‘농촌’이라는 개념을 지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연구해왔는지 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농촌에 접근하기 △농촌을 상상하기 △농촌을 이용하기 △농촌을 소비하기 △농촌을 개발하기 △농촌에서 살기 △농촌을 수행하기 △농촌을 규제하기 △농촌을 다시 만들기 등 총 9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농촌 연구와 도시 연구, 지리학과 사회과학, 지리학과 자연과학 등 진정한 학제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그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이 책은 농촌이나 농업 현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며 “특히 농업 종사자, 농촌 컨설팅 및 관련 공무원, 새로운 ‘농’의 가치에 눈을 돌리는 청년 등에 농촌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밑그림을 그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서출판 따비, 신국판, 400페이지, 22000원〉

충남연구원,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인포그래픽 발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총568개”

“2015년도 매출액 약983억, 2012년 대비 3.7배 증가”

충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568개로 늘었다. 매출액은 2015년 982억 9천만 원으로 2012년 264억 9천만 원보다 약 3.7배 증가했다.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충남연구원은 2월 2일 발
표한 ‘충남의 착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
다’ 인포그래픽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수는 2012년 1213명에서 2015년 3257명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사회공헌비용은 총 13억 5천만 원으로 기업당 평균 300만 원을 환원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분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 15.6%, ‘교육서비스업’ 15.5% 등을 보였다.

사회공헌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이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육·학교·학술 지원’ 15.2%, ‘문화예술·체육 지원’ 10.8%, ‘환경보존’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박춘섭 센터장은 “충남은 지난 5~6년 사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창기를 넘어 성장기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제조업 중심의 업종분포, 고령자 중심의 취약계층 지원 등 일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영화 '밀정' 제작한 이진숙 대표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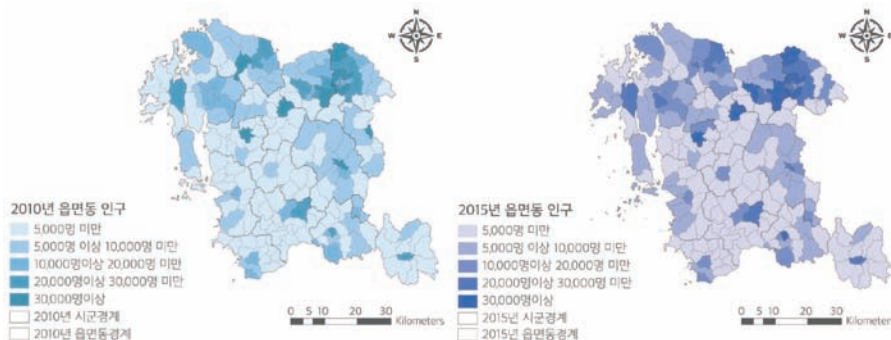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에서 영화 '밀정'을 제작한 (주)영화사 하얼빈의 이진숙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주제는 '영화 〈밀정〉 기획·제작의 여정'으로, 지난해 개봉되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은 영화 '밀정'의 기획과정과 영화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재해석과 공감의 가능성도 함께 나왔다.

한편 이진숙 대표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며, 영화 〈밀정〉을 비롯해 〈시선 1318〉, 〈다섯개의 시선〉,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등을 제작했다.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제10호' 발간 “인구조택 총조사로 본 충남지역 인구변화 분석”

2015년도 충남 총인구, 2010년 대비 3.9% 증가



2015년 충남인구는 총2,107,802명으로 2010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주민 약10만 명이 세종시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월 9일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송두범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본 충남의 인구 변화 분석”(충남 정책지도 제10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충남의 총인구, 인구구조, 외국인 인구 등에 대한 공간자료를 구축하고 5년간의 변화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2015년 기준 인구 고령비(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가장 높은 3개 시·군은 청양군(31.1%), 서천군(30.7%), 부여군(28.8%) 순이었고, 하위는 천안시(8.6%), 계룡시(9.0%), 아산시(10.3%)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충남의 총 인구 부양비(생산가능 인구가 비생산인구를 부양하는 비율)는 평균 43.3으로, 인구 부양비가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서천군(69.4), 청양군(68.5), 부여군(64.5)이었고,

천안시(33.0), 아산시(37.7), 계룡시(39.8)는 가장 낮았다”며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노인 및 일자리 관련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도내 남녀성비(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비율)는 2015년 기준 103.1로 나왔다”며 “2010년에 비해 충남 북부권,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등을 중심으로 남초현상이 진행되었고, 2015년 기준 도내에서 성비 100 미만(여초현상)인 시·군은 계룡시(98.2), 서천군(98.4), 부여군(98.6), 공주시(99.4) 등 4곳”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외국인 인구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2010년에 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2010-2015년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158.2%로 같은 기간 전국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131.3%)보다 26.9%포인트 높았고, 시군별로는 태안군(539.1%), 서천군(406.5%), 보령시(336.5%) 순으로 높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인구편’ 정책지도에 이어 ‘가구·주택편’ 정책지도를 발간해 도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